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전략

박 승 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I. 새로운 지역경제시대를 맞이하여

IMF 외환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년간 고통을 분담하면서 과감한 인력감축과 낭비성 구조의 혁신적 개편으로 방만한 경영행태를 없애는 등 지속적으로 각종 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는 단기간내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당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기간을 제네바 비정부국제기구는 10년, IMF 미셸 캉드쉬 총재는 한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우리는 이런 예측을 여지없이 깨고, 짧은 기간내에 극복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2002년 까지 지속되어 외환보유고는 1,155억달러로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국

가로 급부상했고, 금융권은 전국의 21개 은행 중 20개 은행이 흑자로 전환되어 건실한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장기업 10% 이상은 작년 종전 최고이익을 경신하는 등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을 이미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21세기 두뇌·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Brain-Cyber Korea 21”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전략산업인 IT·BT 등 정보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 LG필립스LCD는 세계최초의 제5세대 LCD 생산공장을 구미에 설립, 금년 하반기에는 일본 샤프사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수위에 오를 전망이고, KT는 지난 5월에 세계 최고속도의 데이터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하여 올해 이익이 전년비 60~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피치, S&P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

가 IMF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무디스 Baa2 → A3(3.28),

피치 BBB+ → A(6.27)

S&P BBB+ → A-(7.24))

특히, 우리 국민은 지난 6월 월드컵 대회에서 16강의 환희, 8강의 꿈, 4강의 신화에 맞춰 질서정연한 응원문화를 연출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Dynamic Korea”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전 세계인에게 과시하였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최대 이벤트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광자원 등이 역사 이래 지구촌 곳곳에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아울러, 외국팀에 대한 민간 응원단인 코리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하여 우호 협력적인 국민이라는 인식이 Korea Brand에 추가되어 대외적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고, 개최지역의 좋은 이미지가 유럽과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파되어 이 지역에서의 우리 상품 수출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35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왔으며, 부가가치까지 통합하면 국내적으로 11조 5천억원, 외국관광객수 45만명, 외국관광객 총지출액 약 10억달러, 그리고 국제적 신인도와 Korea Brand 효과를 합하면 55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10개 개최도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국민 모두가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경

제와 연계시킨 「경제월드컵」으로 개념화하고 지방의 세계화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월드컵이 남겨준 경제적·세계적 효과를 다시 에너지로 모아, 세계경제4강 진입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지방이 경제의 주축이 되어 지역단위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달성해야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방이 경제중심이라는 과감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전략을 수립해서 지역경제기반을 육성하고 경제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II. 국내·외 주요 경제동향

1. 세계 경제동향

(1)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이 엇갈리게 나타나는 등 향후 경기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기업회계부정 파문 확산 등으로 크게 동요하였던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앞으로 다시 침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제기반 취약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 등으로 낙관적 견해보다는 비관적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다.

일본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왔으며, 경제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앞으로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연평균 7~8%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 부상과 시장개방 확대는 중국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제품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인접한 거대시장이라는 측면을 잘 활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계속 위축되는 등 경기회복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세계화개방화는 더욱 촉진되어 무한경쟁 여건은 확대될 것이다.

우리에게 위협과 도전의 기회로 다가오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2001.11부터 시작)은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고, 협상의제로는 농업, 서비스, 공산품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협정의 개정, 환경, 지적재산권,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등이 포함된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국내총생산의 70%이상이 대외무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경제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중에서 WTO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회원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은 금융,

교육, 건설, 환경 등 12개 서비스산업,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50%, 고용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 우리경제에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

우리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으로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남북경협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동북아지역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총생산(GDP) 대비 20%(1999년) → 30%(2020년), 세계물동량 대비 27.0%(1997년) → 30.1%(2006년)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각국 정부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해 싱가폴은 “Industry 21”, 홍콩은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대만은 “아태지역 지역운영센터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세계 유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시에 물류시설의 확충 및 제도정비를 통한 물류중심지화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해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확충과 증장

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국내외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 개발,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 조성, IT·BT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방경제의 새로운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 27~30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경협추진협의회」에서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요 경제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한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의 해결과 임남댐 공동조사 등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남북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북미·북일관계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등 물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남북간 물류교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예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Ⅲ. 지역경제의 현실과 과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주

도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단기간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경제정책 수립능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펼쳐질 21세기 경제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자기지역 경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단점을 극복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도·시군구가 자주적인 지역단위 경제정책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사업활동에 관계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과거에는 사회현상과 관련되는 관리위주 업무였지만, 이제부터는 지역단위 경제정책 종합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도시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모든계획과 시책이 경제시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기지역 경제활성화의 책임기관으로서 지역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국가경제와 관련되는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와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등이 유치되면 자치단체는 자체 경제시책을 부가 시책으로 수립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고속도로 확충과 지방도 등 지방단위 도로가 대대적으로 확충연결되고 있고, 광통신 등 국가기간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적 사업이 전국 도처에 입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제시책과 민간의 기여방안강구 등 경제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을 구상·실천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는 신경을 쓰면서 공단 내 입지업체들의 인력문제나 판로문제나 몰라라 하는 등의 자치행정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역내 기업들에 정보제공업무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활동유도 등 지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시책의 종류도 대부분 시설, 단지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었고, 기업의 경영개선, 재무컨설팅, 기업상품 홍보, 통상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시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에 조성된 공단의 미분양율이 높다거나, 산업유형도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거나, 지역단위의 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제는 더이상 한탄하거나 국가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시도·시군구가 적극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구노력적 경제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별로 경제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도·시군구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들의 상호연관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포함된 개별사업의 경제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국가경제, 지역경제에 대한 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정보관리에 대한 기관장과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며, 지방행정이 사실상 경제행정이라는 인식이 미약하다. 이는 경제정보를 관리할 조직과 인력 등의 인식부족으로 지금까지의 경제시책 결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시도·시군구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를 매우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주택, 건설, 문화, 농수산,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업무가 각기 소관별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자신의 업무가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도 그 도시계획의 경제효과를 간과한 기획은 경제와 관련된 인허가시 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는 등 민간투자자들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효과를 고려하는 분야별 업무수행 자세라야 최상의 “작품”이 탈고되는 것이다.

IV.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략

1.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은 급한 파도를 타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기회는 늘어난 반면에,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더욱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고,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 적극적 대응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큰 사업이나 국가적 과제만이 '경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상행정에서 수행하는 작은 사업, 작은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가 모두 경제업무이다.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무역·통상 등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의 주체는 이제 더 이상 국가단위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이 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경제행정이 덧붙여져야 국가경쟁력이 생기고 국가경제도 활성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행정 전반을 경제적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

무원들의 적극적 경제위주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 경제와 무관한 지방행정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단속·도시계획·건축·토목·위생·환경·교통운수 등 모든 분야별 지방행정 전부가 모두 자기지역의 경제와 직결된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직제상 '경제'라는 단어가 붙은 조직만이 경제담당공무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허가·토목담당 공무원은 지역의 건축·건설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농지전용, 축산, 수산 담당공무원은 농어업 경제에, 그리고 보건·위생·환경·교통운수·관광업무 담당자는 지역의 음식·숙박업, 운수 등 서비스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은 지역경제의 핵심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법적 업무수행, 문제가 없나하는 규제개념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에서 벗어나,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우리 지역 경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지방공무원은 모두 경제담당 공무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모두가 자기 시·군의 경제주역이 되며, 주민·기업 등 지역의 각종 경제주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목, 건설, 어항, 항만, 터미널, 재건축, 재개발 등 지방의 각종사업과 계획은 지역경제의 하드웨어인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근무하는 개발사업담당자들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주역이 되므로, 앞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경제효과를 먼저 생각하고, 규제·간섭보다는 조장·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들은 자기직책이름 뒤에 “경제”를 붙여 직책이름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관광계장은 관광경제계장, 건축계장은 건축경제계장이 되어야 한다.

(3)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최고 경제 CEO」이다

이런 점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제의 사령탑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공무원, 주민, 기업가, 시민단체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투자와 협조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들의 역량을 자기지역 경제활성화라는 틀 속으로 결집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에게는 소관분야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과 신명을 받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등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방의회와는 임기중 최대한의 경제활성화 여건을 만들기 위한 ‘3개년 종합투자계획’ 합의 등 자치단체의 행정정력을 집중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경제활성화의 주체라는 인식 속에 지혜와 역량이 한데 모여 조그마한 마음과 관심, 업무들이 결집될 때 지역의 성장 잠재력도 극대화되어, 생동감 있고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외부적인 여건이 모자란 지역도 나름대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규제 및 인·허가업무는 경제활성화의 수단이다

일선행정 집행과정에서 많은 규제와 인·허가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인·허가 하면 관청의 권위, 행정기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기업 및 민원인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규제’하면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규제와 인·허가 업무가 「경제활성화의 수단」이라는 적극적인 사고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축·위생·교통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더 이상 규제 공무원이 아니라, 기능성 건축양식을 고안하여 권장하고, 요식업소에 대해 보다 청결하고 품격있는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식당주인의 이익실현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차단속을 민간단체로 권한 위임한 것은 관청의 권위를 탈피시켰고,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일거삼득의 효과를 보게된 좋은 사례다.

2.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앞으로의 지역경제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중점 전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계획 및 단체장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을 망라하여 임기중 수행할 경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자치단체,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시책 및 정책자료를 매뉴얼화하여 벤치마킹하고 지역단위 경제인들과도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삼아 의견수렴과 민간참여·협조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 출연 연구원의 지역경제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Think Tank」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현장중심의 경제체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창업에서 상품판매까지 현장밀착형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관장이 시책 분야별로 애로사항 수렴 및 지역경제 방향을 설명하는 기관장 주재 「경제간담회」를 개최하여 인력문제, 판로문제 등 제반 문제점도 검토하고, 중앙의 경제관련부처, 상공

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지역순회 경제 토론회」 기회도 적극 활용하며, 지역내 학계, 산업계, 행정, 주민 등 각계 각층의 경제전문가와 민간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경제포럼」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경제종합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별로 자주적인 경제시책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지원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등 중앙부처의 대규모 대형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점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자치단체별로 부가사업을 자주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함축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한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유망공동브랜드 등의 판로확대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한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경제 인식교육을 위해 KOTRA, 민간경제연구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기능의 경제 중심화가 촉진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경제인과 함께 「경제 CEO포럼」을 구성·활용하여 소관업무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평가보

고회 등을 정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소양고사를 실시하고, 경제시책 경진대회 개최 및 경제살리기 우수단체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중심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경제마인드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가 모든 담당급과 과장급 직책 뒤에 ‘경제’를 넣어서 호칭토록 해야 한다. 관광계장은 관광경제계장, 주택계장은 주택경제계장, 농산계장은 농산경제계장, 상수도 계장은 상수도 경제계장으로, 건설과장은 건설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경제과장으로 호칭한다면(규정은 바꾸지 않더라도) 담당자들의 경제마인드가 훨씬 커지고 업무수행할 때도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자세가 저절로 정착될 것이다.

3.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중점 추진시책

지방의 지역별 경제행정 중심으로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단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포스트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방의 세계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월드컵 개최도시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통상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한 국제통상기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경제기반 전략산업육성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외에도 정부시책과 연

관된 자치단체 부가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행·재정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IT·BT 등 첨단산업육성관련 부가사업 및 물류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위주 지원에서 지역차원의 집중과 선택에 의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실효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경제와 통상관련 부서의 기능보강도 적극 유도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동향, 경제관련부서 및 기관단체의 시책 동향정보 등으로 지역단위 경제시책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국내외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경제관련 법령 제·개정시 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에서 경제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실무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로 합리적이고도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의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회의시 경제현안에 대한 지방의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관련 부처간 지역경제관련시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부처 합동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처간의 중복기능 조정 등으로 경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V. 글을 마치며

한국경제연구소는 내년도 GDP 성장률을 5.5%로 예측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목표는 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한다면 초과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허가 공무원이 자기지역의 건축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지방경제는 희망이 있다. 규제 및 인허가 업무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 지방산업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단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가사업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남북경협 활성화” 등의 경제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기반 배양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만이 주어진 여건을 선점하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정보화,

두뇌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경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에만 만족하지 않고 유라시아, 세계 초일류국가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행정의 경제행정마인드로의 전환이라는 조그마한 변화가 그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의 성공개최가 남겨준 국가이미지 상승효과를 흥분으로만 관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국가이미지 상승이라는 기회는 지방경제의 세계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의 중심에 서서 이제는 경제 4강 달성이라는 국운융성의 모태는 자치단체의 경제 행정을 발전시키려는 의지(Willingness to development)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치단체마다 작은 경제행정부터, 모든 과계가 경제담당 부서라는 인식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